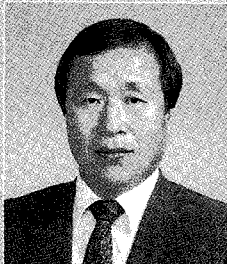


새해에는 자조금의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박종수
충남대학교농과대학 교수

지난해 낙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의 징수금액이 극히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자조금사업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이 지속적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임편승자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낙농산업의 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임편승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유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낙농산업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유의 수급불균형이다.

이미 10,000톤을 넘어선 분유재고는 국내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 새해 3~4월경이면 1,5000톤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소를 비롯한 축산물 전체의 완전 개방과 맞물려 유제품의 수입 또한 급속히 증가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재고가 쌓이다 보면 유업체는 유업체대로 경영의 압박을 느낄 것이고 유업체의 경영압박은 원유의 불공정거래로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 같은 우유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이 전면 개방된 1995년 이후 자주 대두되고 있다. 차체에 수급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활한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다고 수요에 맞추어 생산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일이다.

생산축소는 단기적으로 낙농가의 소득감소와 직결될 뿐 아니라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시키기까지는 막대한 노력과 자금이 투자되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낙농기반까지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급적 수요차원에서 해답을 구해야 하며, 그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해부터 우리 낙농가들은 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 활동을 시도하였다. 자발적인 낙농자조금 사업의 원년에 낙농가들의 80%이상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낙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의 징수금액이 극히 소액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자조금사업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이 지속적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임편승자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낙농산업의 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임편승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소비촉진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낙농가들의 자조금사업과는 별도로 유업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유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표광고를 적어도 음용우유에 대해서는 상호 연대하여 협동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2001년은 유업체도 자조금사업


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유에 대한 협동광고를 실시하고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유업체는 급속히 변화가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제조하는 소량·다품목의 다양하고 신선한 우유·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유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낙농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을 그리고 유업체는 전근대적인 우유·유제품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절약된 생산비와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집유의 일원화 및 검사의 공

영화 등 선진화된 낙농제도가 정착되고 원유의 가격체계 또한 수급조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자 지향적인 차원에서 조정되는 해가 2001년이길 바란다.

생우와 쇠고기의 완전 개방은 육우(젓소·수소)의 가격하락으로 연계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육우와 젓소 노폐우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노폐우는 전량 수매하여 가공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육우 거세우에 대해서도 한우 거세우와 동일하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조치도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필자연락처 : 042-821-5789〉